

‘아파트 민원 해결’ 주택관리사 공무원, 광주도 시작

남구, 자치구 첫 주택관리사 채용
“한해 민원 수백건...효율성 기대”
타 자치구 2~3명 직원 담당 ‘격무’
광주 아파트 비율 두번째로 많아
“전문가 활용·지원센터 추진해야”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이 한 해 수백 건의 민원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광주 남구가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임기제 주택관리사를 채용했다.

이에 타 자치구들도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를 행정에 활용해 효율적 업무 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서 활동하는 주택관리사 공무원은 98명이다. 지자체별로 △경기 36명 △서울 21명 △인천 9명 △충남 7명 △대전 5명 △경남·전북 각 4명 △충북 3명 △전남 2명 △경북·울산 각 1명 등이다. 광주와 강원·부산·제주에는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없었다.

도심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분쟁·법률 질의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도별 주택종류별 주택 비율에 따르면, 광주의 주택 중 80.8%는 아파트다. 이는 전국 두 번째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으로 86.5%를 차지한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 관련 민원도 한 해 수백 건에 달한다.

각 자치구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자치구별로 300~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는 집계 가능한 ‘국민신문고(온라인)’ 민원에 한한 것으로, 전화·방문·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구 3

명 △서구 3명 △남구 2명(주택관리사 미포함) △북구 3명 △광산구 5명 등 뿐이다. 한정된 인력들이 아파트 준공 인허가·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등 기본 업무 외 민원 상담까지 처리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탓에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동주택 관련 부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면서 최근 인원을 1~2명씩 보강해 주고 있다”며 “공동주택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서 민원에 응대하는데,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근무해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시스템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민원 양도 많다 보니 ‘기피부서’로 여겨지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기구 설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수영 서구의원은 임시회서 ‘공동주택 공동관리단 운영’을 제안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

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가 지난해 말 자치구 최초로 시간선택 임기제로 주택관리사 1명을 채용·발령한 것이다. 임용된 주택관리사는 남구와 1년 계약을 맺고 하루 7시간씩 근무하며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민원상담처리 △공동주택 유지관리 실태 지도점검 △감사지원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 의견 대립·갈등·관리규약에 대한 질의 등 민원이 과도한 업무량을 초래했다. 전문가를 채용해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민원인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년 뒤 민원 답변율·주민분쟁 해결 참여도·공동주택 관리주택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임기제 주택관리사 유지·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관리사 공무원 활용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설화 등

을 통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공동주택 업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은 “타 시도는 이전부터 공동주택 분야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왔다. 광주서 이번에 남구가 (주택관리사 공무원 채용) 물꼬를 튼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며 “순환보직인 공무원은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 민원 처리 역량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정 개입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는 민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회장은 “아파트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만큼, 광주시에서도 자문단 형식의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상설기구화해 관련 교육·자문·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비기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놓고 ‘갈등’

광주시교육청 부동의 표명 불구
광주시의회 본회의서 조례 통과
“법률적 검토거쳐 최종 입장 발표”

광주시교육청이 부동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14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1년여 간의 숙의 끝에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는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등이 이유로 조례안에 부동의 표명하 바 있다.

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조례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상충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도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교육청의 태도를 놓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가 많은데,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만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체험·법연수기관인 광주 북구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공식 개장한 14일 광주지역 학생들이 법 체험터 모의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법 교육 전문기관으로 국민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모의법정 등 법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건호기자**

밝혔다. 향후 시교육청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재의결 요구’를 하면, 의회는 재

의결 요구한 조례안을 놓고 20일 이내 회기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시의회

재의결에도 또다시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양기람기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언덕에서 즐기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

“장하은 앙상블”

Romantic Hill

2023. 6. 18.(일) 19:30, 오천그린광장
Saturday June 18 2023, 19:30, Ochen Green Square

일상의 감성과 자연의 정경을 노래하다

고수 김동원

배일동 명창 K-클래식

K-Classical Music by Master Singer Bae Il-Dong

2023. 6. 17.(토) 19:30, 오천그린광장
Saturday June 17 2023, 19:30, Ochen Green Square